

사회배제를 보는 또 다른 시각: 도움받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들¹⁾

Another Viewpoint on Social Exclusion: People Who Exclude Themselves

정세정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김기태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지금까지 사회배제와 관계된 연구 또는 정책은 도움이나 지원이 필요한 집단이 누구인가에 초점이 맞춰 전개됐다. 이 글에서는 배제의 주체를 입체적으로 고려하여 사회배제 집단을 도움받을 곳이 있고 도움받을 의사가 있는 '비배제 집단'(집단 I), 도움받을 곳이 있으나 도움받기를 원하지 않는 '자발적 배제 집단'(집단 II), 도움받을 곳은 없지만 도움받기를 원하는 '비자발적 배제 집단'(집단 III), 도움받을 곳도 없고 도움받기를 원하지도 않는 '고립 집단'(집단 IV)으로 구분했다.

'사회 참여, 자본, 인식 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살펴본 결과에 따르면, 도움을 희망하는 집단은 사회복지 확대를 위한 증세와 소득 격차 감소가 정부 책임이라는 데 대한 동의 수준이 도움을 희망하지 않는 집단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더불어 도움을 희망하는 집단은 도움을 원치 않는 집단에 비해 사회 참여 의사가 있다는 응답 비율이 높았다.

이 글에서는 도움을 희망하지 않는 집단을 포착함으로써 사회배제를 더욱 입체적으로 이해할 여지를 열었다. 이들 집단은 사회와 국가가 지원 체계를 갖추고 있다 하더라도 사각지대로 남을 가능성이 높다. 이들에 대한 추가적이고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1. 들어가며

부의 사회복지부 장관을 지낸 르네 르누아르(Rene Lenoir)가 1970년대에 처음 제안했다. 사회배제의 개념은 프랑스 시라크(Chirac) 정(Silver, 1994). 그는 프랑스 사회에서 사회배제

1) 이 글은 정세정, 김기태, 김태완, 류진아, 강예은, 이영수, 이관후. (2021). 『사회배제 대응을 위한 새로운 복지국가 체제 개발』에서 수행한 '사회 참여, 자본, 인식 조사'의 내용을 추가 분석한 것이다.

집단이 인구의 10% 정도를 차지할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이 집단에 포함될 수 있는 이들로 정신·육체장애인, 자포자기한 사람들, 약물중독자들을 제시했다. 이후 사회배제가 정책 영역에서 주목을 받으면서 세계 각국에서 양적인 측정을 시도했으나 개념에 대한 합의된 정의는 없다 (Snape et al., 2021). 이를테면, 영국의 국제개발부는 이를 “일정한 집단이 차별을 당한 결과 체계적인 불이익에 시달리는 과정”(Bettes, Watson, & Gaynor, 2010, p. 1)으로 해석했다. Levitas et al.(2007)은 “자원과 권리, 상품과 서비스가 부족하거나 거부된 상태로, 사회 대부분의 인구에게는 가용한 일반적인 관계 및 활동에 참여하지 못하는 상태”(p. 1)로 정의했다. 이에 따르면 사회배제는 배제를 당하는 당사자의 의사와 무관하거나 반해서 발생하게 된다.

영국의 교육학자인 바이너(Bynner, 1999; Evans et al., 2000, p. 2. 재인용)가 제시한 사회배제 개념은 쌍방향이다. 그는 “개인이나 집단이 근대적인 삶의 영역, 즉 교육, 고용, 지역사회, 시민사회에 참여하는 데 실패하거나 스스로를 배제”(필자 강조)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르면, 인구집단의 일부를 배제하는 주어는 1) 사회 전반 혹은 사회의 주류가 될 수도 있고 2) 자발적으로 배제를 선택하는 당사자일 수도 있다.

지금까지 사회배제와 관련된 연구들은 모두 첫 번째 개념에 주목해 왔다(예: Vrooman & Hoff, 2013; van Bergen, Hoff, Schreurs, van Loon & van Hemert, 2017; 김태완 외, 2019).

그에 따라 사회배제의 지표는 소득, 노동, 건강, 교육 등 영역별 통계에 근거해 작성됐다. 일례로, 유엔의 유럽경제위원회(United Nations Economic Commission for Europe)는 사회배제 지표 작성을 위해 33명의 통계 전문가로 구성된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다양한 사회배제 지표들을 집계한 결과, 배제의 범주를 일곱 가지(물질적 자원, 금전적 빈곤, 고용, 교육과 기술, 건강과 장애, 공공 서비스, 시민사회 및 정치 참여)로 나누어 제시했다(Snape et al., 2021). 내용을 보면, 유럽 국가 및 국제기구에서 개발한 사회배제 지표들은 당사자의 자발적 배제에 대한 내용을 담지는 않았다.

이 글에서는 전통적인 의미의 배제·비배제 구분에 자발성·비자발성 기준을 보탤다. 그렇게 배제·비배제의 성격에 따라 4개 집단으로 구분했다. 그리고 네 집단의 특성, 복지 인식 및 사회 참여 의사를 비교·분석했다. 기존 사회정책 영역에서는 욕구가 있으나 이를 충족하지 못하는 ‘도움을 받지 못하는’ 집단에 초점을 맞추었고, ‘도움을 원하지 않는’ 집단은 관심의 영역에서 배제됐다. 이 글에서는 새로운 기준에 따라 자발적으로 배제되거나 고립된 인구를 포착했다. 그리고 이들에 대한 분석을 통해 사회정책적 함의를 이끌어 냈다.

2. 배제·비배제 4개 집단 구분 및 집단별 특성

가. 배제·비배제 4개 집단 구분

배제 문제에 입체적으로 접근하기 위해 이 글

에서는 Bynner(1999)의 정의를 고려했다. 여기서 활용하는 ‘사회 참여, 자본, 인식 조사’²⁾에서는 “귀하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도움을 받고 싶은 집단(희망)이 있겠지만, 실제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집단(가능)이 다를 수 있습니다.”라는 예문을 제시하고, 두 집단의 유무를 나누어 응답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배제·비배제 범주는 도움 유무와 도움받을 의사 유무에 따라 네 집단으로 나눌 수 있다.³⁾ 첫째, 도움받을 곳이 있고 도움받을 의사가 있는 ‘비배제 집단’(집단 I)이다. 둘째, 도움받을 곳이 있으나 도움받기를 원하지 않는 ‘자발적 배제 집단’(집단 II)이다. 셋째, 도움받을 곳은 없지만 도움받기를 원하는 ‘비자발적 배제 집단’(집단 III)이다. 넷째, 도움받을 곳도 없고 도움받기를 원하지도 않는 ‘고립 집단’(집단

IV)⁴⁾이다. 이렇게 범주화한 네 집단은 <표 1>과 같다.

‘사회 참여, 자본, 인식 조사’는 구체적인 문제 상황 8가지를 제시하고, 해당 상황에서 도움받을 곳이 있는지와 도움받기를 원하는지를 질문했는데, 여기서는 1) 갑자기 큰돈이 필요할 때 2) 우울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을 때, 두 가지 문제 상황을 활용했다. 도움받을 곳이 있는지와 도움받기를 원하는지에 대한 질문의 보기로는 ① 가족(친척) ② 지인(친구, 이웃, 직장 동료 등) ③ 공공기관(주민센터, 정부 등) ④ 민간기관(종교, 사회복지단체 등) ⑤ 어떤 사람·기관도 없음이 제시되었다.

설문 응답자가 ‘도움받을 곳이 있는지’와 ‘도움받기를 원하는지’를 나누어 묻고 그 결과에 주

표 1. 도움 유무 및 도움 희망 여부에 따른 네 가지 배제의 범주

	도움받기를 원함	도움받기를 원하지 않음
도움받을 곳이 있음	집단 I. 비배제	집단 II. 자발적 배제
도움받을 곳이 없음	집단 III. 비자발적 배제	집단 IV. 고립

자료: 필자 작성.

- 2) ‘사회 참여, 자본, 인식 조사’는 2021년 기준 만 19세 이상 대한민국 거주 성인 1만 558명을 대상으로 60세 이상에 대해서는 대면 조사를 통해, 60세 미만에 대해서는 웹 조사를 통해 2021년 8월부터 10월까지 수행되었다. 그러나 데이터 검수 및 연구진·조사업체·전문가 자문 결과, 조사 방법의 차이로 인해 모드 효과가 발생할 가능성과 코로나19로 인해 감염에 취약한 노인 독거 가구를 방문하기 어려웠던 점 등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60대 이상은 제외하고 50대까지의 대상 8,185명의 표본을 분석에 활용했다. 이 부분은 이번 분석의 한계로 남긴다.
- 3) 전통적인 기준에서는 물질적 배제의 기준으로 빈곤 여부, 주관적 계층 의식, 박탈 등을 이용했다(Snape et al., 2021; 김태완 외, 2019). 여기에서는 본인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주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물질적 배제의 기준으로 삼았다. 이유는 두 가지다. 첫째, Levitas et al.(2007)의 사회적 배제 정의에서 “자원과 권리, 상품과 서비스가 부족하거나 거부된 상태로, 사회 대부분의 인구에게는 가용한 일반적인 관계 및 활동에 참여하지 못하는 상태”(p. 1)라는 표현을 따랐다(밀줄은 필자 강조). 둘째, ‘주변에서 도움을 받기를 주관적으로 희망’하는지 여부와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함께 분석하기 위해서다.
- 4) 통계청(2022)은 사회적 고립도를 측정하기 위해 ① 몸이 아파 집안일을 부탁해야 할 경우 ② 갑자기 많은 돈을 빌려야 할 경우 ③ 낙심하거나 우울해서 이야기 상대가 필요한 경우 도움받을 사람이 없는 사람들의 비율을 연도별로 발표하고 있다. 이번 분석에서도 세 문항 가운데 두 문항과 유사한 내용을 제시했다. 단, 이 글에서는 도움받을 사람이 없고 도움받기를 원하지 않는 경우를 ‘고립’으로 보았다.

표 2. 도움이 필요한 두 가지 상황과 상황별 배제·비배제 집단 구분

상황	집단 구분	내용
갑자기 큰돈이 필요할 때	집단 I. 비배제	갑자기 큰돈이 필요할 때, 도움받을 곳도 있고 도움받기를 원함
	집단 II. 자발적 배제	갑자기 큰돈이 필요할 때, 도움받을 곳은 있지만 도움받기를 원하지 않음
	집단 III. 비자발적 배제	갑자기 큰돈이 필요할 때, 도움받을 곳은 없지만 도움받기를 원함
	집단 IV. 고립	갑자기 큰돈이 필요할 때, 도움받을 곳도 없고 도움받기를 원하지도 않음
우울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을 때	집단 I. 비배제	우울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을 때, 도움받을 곳도 있고 도움받기를 원함
	집단 II. 자발적 배제	우울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을 때, 도움받을 곳은 있지만 도움받기를 원하지 않음
	집단 III. 비자발적 배제	우울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을 때, 도움받을 곳은 없지만 도움받기를 원함
	집단 IV. 고립	우울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을 때, 도움받을 곳도 없고 도움받기를 원하지도 않음

자료: 필자 작성.

목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사회배제를 극복하기 위한 수단으로 공동체가 제도적·비제도적 수단을 통한 지원 체계를 갖추고 있다 하더라도 당사자가 도움을 원하지 않는다면 정책 효과는 미미할 수밖에 없다. 현재 대부분의 제도적 지원은 신청주의에 기반하여 제공되고 있고, 비제도적 지원은 당사자가 도움을 청하지 않으면 지원 및 연대가 어렵다는 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따라서 현재 사회정책의 대상자는 도움받을 의사가 있는 집단 I과 III에 한정될 가능성이 높다.

기존 사회배제 혹은 사회자본 연구에서는 도움받을 곳 유무에만 주목했다. 이에 따르면 자발적 배제(집단 II)는 비배제(집단 I) 집단과 섞이고, 다소 이질적인 비자발적 배제(집단 III)와 고립(집단 IV) 집단이 ‘배제 집단’으로 뒤섞이는 한계가 있다. 여기서 자발적 배제 집단(집단 II)이 비배제 범주에 포함됐다는 점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이번 분석에 따르면 이들은 주변에 가용한 자원이 있어도 도움받기를 원하지 않는 집단이다. 이들 역시 자발적으로 배제를 선택했다는

점에서 배제 집단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배제·비배제 네 가지 유형의 인구 분포를 파악했다. 또 이들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복지 인식, 사회 참여 의사를 살펴보았다. 집단 유형에 따라 복지 인식, 사회 참여 의사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

나. 배제·비배제 4개 집단의 분포와 특성

배제·비배제 4개 집단을 살펴보면, ‘갑자기 큰돈이 필요할 때’를 기준으로 도움받을 곳도 있고 도움받기를 원하는 비배제 집단(I)은 65.58%, 도움받을 곳은 있지만 도움을 원치 않는 자발적 배제 집단(II)은 8.61%, 도움받을 곳은 없지만 도움받기를 원하는 비자발적 배제 집단(III)은 12.74%, 도움받을 곳도 없고 도움받기를 원하지도 않는 고립 집단(IV)은 13.07%이다(표 3).

‘우울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를 기준으로 보면, 비배제 집단(I)은 72.05%, 자발적 배제 집단(II)은 8.32%, 비자발적 배제 집단(III)은

표 3. 갑자기 큰돈이 필요할 때 도움 가능 여부 및 도움 희망 여부에 따른 응답자 분포

(단위: %)

	도움받기를 원함	도움받기를 원하지 않음
도움받을 곳이 있음	65.58 (집단 I . 비배제)	8.61 (집단 II . 자발적 배제)
도움받을 곳이 없음	12.74 (집단 III . 비자발적 배제)	13.07 (집단 IV . 고립)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 사회 참여, 자본, 인식 조사에 근거해 필자 작성.

표 4. 우울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을 때 도움 가능 여부 및 도움 희망 여부에 따른 응답자 분포

(단위: %)

	도움받기를 원함	도움받기를 원하지 않음
도움받을 곳이 있음	72.05 (집단 I . 비배제)	8.32 (집단 II . 자발적 배제)
도움받을 곳이 없음	7.86 (집단 III . 비자발적 배제)	11.78 (집단 IV . 고립)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 사회 참여, 자본, 인식 조사에 근거해 필자 작성.

7.86%, 고립 집단(IV)은 11.78%이다(표 4).

다음으로, ‘갑자기 큰돈이 필요할 때’를 기준으로 네 개 집단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살펴보았다(표 5). 이른바 ‘주류’에 속하는 비배제 집단에서는 상대적으로 5분위의 비율이 높다. 그러나 1, 2분위의 비율도 각각 16.43%와 20.85%로 적지 않게 분포하고 있다. 고립 집단(IV)은 전체 집단에 비해 1분위의 비율(28.45%)이 높다. 그러나 4, 5분위의 비율도 각각 16.40%와 14.22%로 적지 않게 분포함을 확인할 수 있다. 가구 구성 및 학력에서도 유사한 양상이 나타난다. 학력이 낮으면 배제의 가능성이 높아지지만, 고학력 집단 안에서도 도움을 받지 못하거나 도움을 희망하지 않는 배제의 비율이 일정하게 관찰됐다. 즉, 배제·비배제로 나눈 네 집단이 전통적으로 소득, 지역, 학력을 기준으로 하는 취약집단의 분포와 정확히 비례하지는 않았다. 이와 같은 양상

은 ‘우울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을 때’의 배제·비배제를 기준으로 한 네 집단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살펴보았을 때도 유사하게 나타난다. 배제·비배제 집단의 기준에 대한 접근은 기존의 취약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분석과는 별도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3. 배제·비배제 4개 집단의 복지 인식

취약계층의 복지 인식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들의 분석 결과는 비일관적이다. 2019년 한국복지패널 기초분석 결과에 따르면(여유진 외, 2019, p. 183), 복지를 위해 세금을 더 걷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저소득 가구원의 찬성 비율(38.56%)은 일반 가구원의 찬성 비율(41.87%)에 비해 낮다. 백정미, 주은선, 김은지(2008)는 한국의 복지 인식을 스웨덴, 프랑스, 미국과 비교해서 분석

표 5. 갑자기 큰돈이 필요할 때를 기준으로 본 네가지 배제 범주 집단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단위: %)

		전체	집단 I. 비배제	집단 II. 자발적 배제	집단 III. 비자발적 배제	집단 IV. 고립
성별	남성	51.62	52.96	48.82	46.39	51.81
	여성	48.38	47.04	51.18	53.61	48.19
	계	100	100	100	100	100
연령	19~29세	23.52	25.52	23.65	18.27	18.51
	30~39세	22.36	22.39	25.21	18.72	23.91
	40~49세	26.24	24.73	26.66	31.14	28.77
	50~59세	27.88	27.36	24.48	31.88	28.81
	계	100	100	100	100	100
학력	초졸 이하	0.30	0.32	0.15	0.46	0.12
	중졸	1.43	1.19	1.73	1.56	2.29
	고졸	36.93	35.75	35.36	38.97	41.93
	대졸 이상	61.34	62.74	62.75	59.00	55.66
	계	100	100	100	100	100
지역	대도시	43.96	43.81	45.92	43.83	43.59
	중소도시	51.96	52.02	50.79	52.10	52.25
	농어촌	4.08	4.17	3.29	4.07	4.16
	계	100	100	100	100	100
가구 구성	1인	11.76	11.17	11.47	14.65	12.10
	2인	14.73	14.36	14.11	16.54	15.28
	3인	27.87	27.37	26.42	29.27	30.02
	4인	34.46	35.46	34.81	30.34	33.19
	5인 이상	11.18	11.65	13.20	9.20	9.42
	계	100	100	100	100	100
소득 분위	1분위	19.84	16.43	19.47	28.89	28.40
	2분위	22.13	20.85	22.68	26.66	23.82
	3분위	16.76	17.52	13.23	14.89	17.16
	4분위	20.02	21.36	21.71	15.63	16.40
	5분위	21.24	23.85	22.91	13.93	14.22
	계	100	100	100	100	100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 사회 참여, 자본, 인식 조사에 근거해 필자 작성.

했는데, 3개국에서는 계층이 낮을수록 복지 인식이 높게 나타난 반면, 한국에서는 계층은 유의미한 변수가 아니라고 설명했다. 정부 지출의 영역을 노인 삶의 질 보장, 의료비 본인부담률 경감, 빈곤층 소득지원, 일자리 지원, 주택 지원, 대학 교육비 지원과 같이 영역별로 구분하고 해당 영역의 불안정성이 내재된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으로 구분하여 질문한 연구(김문길 외, 2020,

pp. 112-114)에서는 다른 양상이 포착됐다. 노인 삶의 질 보장, 의료비 본인부담률 경감, 빈곤층 소득 지원 분야에서는 위험을 인식하는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정부가 해당 분야에 지출을 확대해야 한다는 데 대한 동의 수준이 높았지만, 일자리·주택·대학 교육비 지원에서는 해당 위험에 대한 인식 차이와 정부 지출의 확대 필요성에 대한 동의 수준은 높지 않게 나타난 것이다.

김영순, 여유진(2011)은 2007년 복지패널 부가조사를 분석한 결과, 정부의 재분배 책임, 사회복지 확대를 위한 증세 등의 문항에 대한 응답에서 계급적인 경향이 발견되지 않는다고 하며 이를 한국인의 복지 태도에서 나타나는 '비계급성과 비일관성'이라 설명했다.

'사회 참여, 자본, 인식 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는 흥미롭다. <표 6>과 같이 '도움받을 곳이 있음'을 기준으로 조사 대상을 두 집단으로 나눴을 때는 복지에 대한 태도, 정부 책임에 대한 인식이 문제 상황에 따라 일관되게 나타나지 않는다. 이는 과거 연구와 유사한 결과다. 갑자기 큰 돈이 필요할 때 도움받을 곳이 없는 집단

(III, IV)은 도움받을 곳이 있는 집단(I, II)에 비해 사회복지 확대를 위한 증세에 대한 동의 수준은 더 낮은 반면, 소득 격차 감소가 정부 책임이라는 데 대한 동의 수준은 더 높았다. 또한 두 집단의 차이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은 소득 격차 감소에 대한 정부 책임의 경우에만 유의했다.

우울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을 때 도움받을 곳이 있는 집단(I, II)은 도움받을 곳이 없는 집단에 비해 사회복지 확대를 위한 증세에 대한 동의 수준이 높았다. 반대로, 소득 격차 감소를 위한 정부 책임에 대해서는 도움받을 곳이 없는 집단(III, VI)의 동의 수준이 도움받을 곳이 있는 집단(I, II)보다 더 높았다. 이와 같은 분석은 취약계층

표 6. 갑자기 큰돈이 필요할 때, 도움 유무에 따른 집단별 복지 인식

(단위: 점)

		사회복지 확대를 위해서는 세금을 더 거두어야 한다	고소득자와 저소득자 사이의 소득 격차를 줄이는 것은 정부의 책임이다**
갑자기 큰돈이 필요할 때	도움받을 곳이 있음 (집단 I, II)	3.11	3.70
	도움받을 곳이 없음 (집단 III, IV)	3.08	3.77
평균		3.10	3.72

주: 1) 1~5점 척도. 점수가 높을수록 동의 수준이 높음을 의미함.
 2) *p < 0.5, **p < 0.1, ***p < 0.001 수준에서 유의함.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 사회 참여, 자본, 인식 조사에 근거해 필자 작성.

표 7. 우울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을 때, 도움 유무에 따른 집단별 복지 인식

(단위: 점)

		사회복지 확대를 위해서는 세금을 더 거두어야 한다***	고소득자와 저소득자 사이의 소득 격차를 줄이는 것은 정부의 책임이다**
우울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을 때	도움받을 곳이 있음 (집단 I, II)	3.11	3.70
	도움받을 곳이 없음 (집단 III, IV)	3.08	3.78
평균		3.10	3.72

주: 1) 1~5점 척도. 점수가 높을수록 동의 수준이 높음을 의미함.
 2) *p < 0.5, **p < 0.1, ***p < 0.001 수준에서 유의함.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 사회 참여, 자본, 인식 조사에 근거해 필자 작성.

층의 복지 인식에 대한 앞선 연구들이 비일관적인 결과를 낸 것과 일맥상통하는 결과로 볼 수 있다(표 7).

이번에는 도움받기를 원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배제·비배제 네 집단을 두 집단으로 구분했다. 이에 따르면, 도움받기를 원하는 집단(I, III)과 도움을 원하지 않는 집단(II, IV)으로 나뉜다. 이렇게 구분하면, 집단별 복지 인식 차이에서 일관성이 포착된다. 갑자기 큰돈이 필요할 때와 우울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을 때 모두 도움받기를 원하는 집단(집단 I, III)은 도움받기를 원하지 않는 집단(집단 II, IV)에 비해 사회복지 확대를 위

해 세금을 더 거둬야 하고 고소득자와 저소득자 사이의 소득 격차를 줄이는 것이 정부의 책임이라는 데 대한 동의 수준이 높았다. 더불어 집단 간 차이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했다(표 8, 표 9).

4. 배제·비배제 4개 집단의 사회 참여 의사

다음으로, 배제·비배제 4개 집단의 사회 참여 의사를 물었다. 복지 인식 문항에서는 행위 주체가 국가였다면, 사회 참여 문항에서 행위 주체는 응답자 ‘자신’이다. 사회배제의 연구에서 참여가 중요한 이유는 배제를 ‘참여의 결여’로 보는 경향

표 8. 갑자기 큰돈이 필요할 때, 도움 희망 여부에 따른 집단별 복지 인식

(단위: 점)

		사회복지 확대를 위해서는 세금을 더 거둬야 한다***	고소득자와 저소득자 사이의 소득 격차를 줄이는 것은 정부의 책임이다***
갑자기 큰돈이 필요할 때	도움을 원함 (집단 I, III)	3.13	3.74
	도움을 원하지 않음 (집단 II, IV)	3.01	3.63
평균		3.10	3.72

주: 1) 점수가 높을수록 동의 수준이 높음을 의미함.
 2) *p < 0.5, **p < 0.1, ***p < 0.001 수준에서 유의함.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 사회 참여, 자본, 인식 조사에 근거해 필자 작성.

표 9. 우울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을 때, 도움 희망 여부에 따른 집단별 복지 인식

(단위: 점)

		사회복지 확대를 위해서는 세금을 더 거둬야 한다***	고소득자와 저소득자 사이의 소득 격차를 줄이는 것은 정부의 책임이다*
우울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을 때	도움을 원함 (집단 I, III)	3.13	3.73
	도움을 원하지 않음 (집단 II, IV)	3.01	3.67
평균		3.10	3.72

주: 1) 점수가 높을수록 동의 수준이 높음을 의미함.
 2) *p < 0.5, **p < 0.1, ***p < 0.001 수준에서 유의함.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 사회 참여, 자본, 인식 조사에 근거해 필자 작성.

이 있기 때문이다(Levitas et al., 2007; Bynner, 1999). 이에 따르면, 적극적인 사회 참여는 배제를 해소하기 위한 실마리가 된다. 또한, 사회 정의 실현과 관계된 사회 참여 의사는 공존을 위한 결속 또는 실천적 참여의 의미를 내포하는 연대(solidarity)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여기서는 사회의 부정이나 비리를 바로잡기 위해 ‘주변 사람과 이야기하기’, ‘블로그·트위터·페이스북·온라인 게시판 등에 의견 올리기’, ‘시위, 집회 등에 참여하기’, ‘서명운동 참여하기(온라인 서명 포함)’, ‘공무원, 정치인에게 민원이나

의견을 전달하기’ 범주 각각에 대한 참여 의사 비율을 살펴봤다. 네 집단별 사회 참여 의사에서는 복지 인식과 동일한 일관성이 포착됐다. 갑자기 큰돈이 필요할 때와 우울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을 때 모두 도움받기를 원하는 집단은 도움받기를 원하지 않는 집단에 비해, 도움받을 곳 유무와 관계없이 사회의 부정이나 비리를 바로잡기 위한 참여 범주 모두에서 참여 의사가 있다는 응답 비율이 더 높았다. 또한 네 집단 간 평균의 차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했다.

눈여겨볼 점은 비자발적 배제 집단(III)과 고립

표 10. 갑자기 큰돈이 필요한 상황 기준으로 배제·비배제 4개 집단 구분 시, 사회의 부정이나 비리를 바로잡기 위한 사회 참여 의사가 있다는 응답 비율

(단위: %)

	전체	집단 I. 비배제	집단 II. 자발적 배제	집단 III. 비자발적 배제	집단 IV. 고립
주변 사람과 이야기하기***	84.15	87.20	81.43	85.67	69.14
블로그·트위터·페이스북·온라인 게시판 등에 의견 올리기***	60.04	63.16	53.48	63.19	45.60
시위, 집회 등에 참여하기***	24.06	26.30	21.66	22.69	15.71
서명운동 참여하기(온라인 서명 포함)***	54.48	57.07	52.59	56.72	40.56
공무원, 정치인에게 민원이나 의견을 전달하기***	59.24	63.12	50.46	61.47	43.40

주: *p < 0.5, **p < 0.1, ***p < 0.001 수준에서 유의함.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 사회 참여, 자본, 인식 조사에 근거해 필자 작성.

표 11. 우울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은 상황 기준으로 배제·비배제 4개 집단 구분 시, 사회의 부정이나 비리를 바로잡기 위한 사회 참여 의사가 있다는 응답 비율

(단위: %)

	전체	집단 I. 비배제	집단 II. 자발적 배제	집단 III. 비자발적 배제	집단 IV. 고립
주변 사람과 이야기하기***	84.15	87.03	82.87	80.01	70.20
블로그·트위터·페이스북·온라인 게시판 등에 의견 올리기***	60.04	62.50	55.72	60.53	47.67
시위, 집회 등에 참여하기***	24.06	25.61	21.23	21.44	18.33
서명운동 참여하기(온라인 서명 포함)***	54.48	56.39	54.41	53.47	43.49
공무원, 정치인에게 민원이나 의견을 전달하기***	59.24	62.44	52.59	58.93	44.59

주: *p < 0.5, **p < 0.1, ***p < 0.001 수준에서 유의함.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 사회 참여, 자본, 인식 조사에 근거해 필자 작성.

집단(IV) 간 사회 참여 의사 격차와 비배제 집단 (I)과 자발적 배제 집단(II) 간 사회 참여 의사 격차이다. 비자발적 배제 집단(III)은 도움받을 곳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회 참여 의사가 있다는 응답이 고립 집단(IV)에 비해 대체로 높게 나타난다. 각 참여의 범주에서 비배제 집단과 자발적 배제 집단 간 참여 의사 격차는 최소 1.98%포인트에서 최대 12.66%포인트이다. 비자발적 배제와 고립 집단 간 참여 의사 격차는 최소 3.11%포인트에서 6.98%포인트에서 최대 18.07%포인트에 이른다.

5. 나가며

이 글에서는 사회배제·비배제 영역에서 도움 받을 곳 유무뿐 아니라 도움받기를 원하는지 여부도 함께 살펴보았다. 그러한 기준에 따라 새로운 집단(집단 II, 집단 IV)을 포착할 수 있었다. 또 배제·비배제 네 집단에 복지 인식 및 참여 의사를 물었을 때, 도움 유무를 기준으로는 집단별 차이가 비일관적으로 나온 반면, 도움 희망 여부에 따라서는 집단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고 일관되게 나타나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도움을 희망하는 집단은 원치 않는 집단에 비해 사회복지 확대를 위한 증세와 소득 격차 감소가 정부 책임이라는 데 대한 동의 수준이 더 높았으며, 사회 참여 의사가 있다는 응답 비율 또한 높았다.

지금까지 사회배제와 관계된 연구 또는 정책은 도움이나 지원이 필요한 집단이 누구인가에

초점이 맞춰 전개됐다. 그 과정에서 당사자가 도움받기를 원하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을 기울이지 못했다. 한국은 빠른 경제 발전 과정에서 긴급한 복지 수요에 맞춰 복지국가의 기틀을 다지는 것이 급선무였다. 그 과정에서 제도적 측면의 빠른 발전과 개선이 이뤄졌으나, 제도의 수요자 입장에서 복지급여를 수용할 의사가 있는지는 연구의 대상이 된 바가 없었다.

이번 연구는 도움을 희망하지 않는 집단을 포착함으로써 사회적 배제를 더욱 입체적으로 이해할 여지를 열었다. 이들 집단은 사회와 국가가 지원 체계를 갖추고 있다 하더라도 사각지대로 남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특히 고립 집단(집단 IV)은 이른바 고독사, 은둔형 외톨이, 가족 살해 후 자살과 같은 문제에 이미 직면했을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삶의 벼랑 끝에서 도움을 받을 곳도 없을뿐더러 도움을 원치도 않는 처지에 내몰렸을 가능성이 높다. 이와 같은 고립의 문제는 현재 진행되는 코로나19 감염병의 범유행 상황에서 더욱 심화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초연결 사회에서도 역설적으로 연대의 기반을 허무는 고립의 문제는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Hertz, 2020). 이번 연구는 한국의 성인층 ‘고립 집단’이 12~13%를 차지했다는 점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단, 이번 분석에서 활용한 ‘사회 참여, 자본, 인식 조사’에서 60대 이상을 제외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1인 가구 중 다수를 차지하는 노인 집단을 포함하면 한국의 고립 집단 비율은 더 높아질 가능성

도 크다.

자발적 배제 집단(집단 II)도 주목을 끈다. 이들은 주변에 도움받을 곳이 있음에도 도움을 희망하지 않는 특성을 나타냈다. 이들은 설문 대상자 가운데 8~9%를 차지했다. 이들이 왜 도움을 원치 않는지 그 이유는 불분명하다. 이들은 일정한 사회적 연결망이 있음에도 도움을 거부하며, 재분배에 대한 동의 수준이나 사회 참여 의사가 있다는 응답 비율도 상대적으로 낮았다. 집단 IV가 비자발적으로 고립됐다면, 자발적인 배제를 선택한 이들 집단 정서의 이면에는 연대의 거부, 관계의 단절, 극단적 개인주의, 냉소 등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한국 사회는 급격한 산업화 및 반복되는 경기 침체를 거치면서 가족 등 사적 공동체의 해체를 경험하고 있다. 급속도로 증가하는 1인 가구는 이와 같은 경향을 방증한다. OECD(2020)의 조사에서 “어려움에 처했을 때 지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응답한 비율을 보면, 한국은 그 비율이 매우 낮은 국가 중 하나이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이와 같은 경향이 가속화했을 가능성이 있다. 사회적 거리 두기 속에서 이들은 연대와 네트워크를 거부하며 고립과 은둔을 선택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급여의 제공이 곧 욕구의 충족으로 연결될 것이라고 가정하는 복지국가의 공적 네트워크 확충만으로는 이들을 사회에 연결시키는 데 한계가 있다. 주변의 도움을 거부하는 이들은 상호부조 및 연대의 가능성도 낮아질 수밖에 없다. 이들 집단의 성격 및 현황, 정책적 수요에 대한

추가적이고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

참고문헌

- 김문길, 우선희, 여유진, 정해식, 곽윤경, 홍성운. (2020). 사회통합 실태 진단 및 대응방안 연구(VII)-사회통합과 사회이동(2).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태완, 김기태, 정세정, 이주미, 최준영, 강예은, 김보미, 정재훈, 안주영, 송치호. (2019). 사회배제 대응을 위한 새로운 복지국가 체제 개발.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영순, 여유진. (2011). 한국인의 복지태도: 비계급성과 비일관성 문제를 중심으로. 경제와 사회, 211-240.
- 백정미, 주은선, 김은지. (2008). 복지인식 구조의 국가간 비교-사민주의, 자유주의, 보수주의 복지국가와 한국. 사회복지연구, 37, 319-344.
- 여유진, 오미애, 이병재, 최준영, 이주미, 김근혜, 김선 외. (2019). 2019년 한국복지패널 기초분석 보고서.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정세정, 김기태, 류진아, 김태완, 강예은, 이영수, 이관후. (2021). 사회배제 대응을 위한 새로운 복지국가 체제개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통계청. (2022). 사회적 고립도. <https://www.index.go.kr/unify/idx-info.do?idxCd=4272&clasCd=7>에서 2022. 4. 7. 인출.
- Bettes, J., Watson, S., & Gaynor, C. (2010). DFID Global Social Exclusion Stocktake report: Annexes. London:

- DFID.
- Bynner, J. (1999). Risks and outcomes of social exclusion insights from longitudinal data. OECD, Paris, mimeo.
- Evans, P., Bronheim, S., Bynner, J., Klasen, S., Magrab, P., & Ranson, S. (2000). Social exclusion and children—creating identity capital: Some conceptual issues and practical solutions. Retrieved from <http://citeseerx.ist.psu.edu/viewdoc/download?doi=10.1.1.366.4480&rep=rep1&type=pdf> 2022. 3. 14.
- Hertz, N. (2020) *The Lonely Century: a call to reconnect*. London: Hachette UK.
- Levitas, R., Pantazis, C., Fahmy, E., Gordon, D., Lloyd, E., & Patsios, D. (2007). The Multi-dimensional analysis of social exclusion. Department of sociology and school for social policy, townsend centre for the international study of poverty and bristol institute for public affairs, University of Bristol.
- Silver, H. (1994). Social exclusion and social solidarity: three paradigms. *International Labour Review*. 133, 531-578.
- Snape, D., Muja, B., Martirosova, D., Markosyan, L., Yakimovich, O. Heisz, A., ... Scharlin-Pettee, S. (2021). Approaches to measuring social exclusion. United Nations Economic Commission for Europe. Retrieved from https://unece.org/sites/default/files/2021-03/05_SocialExclusion_forConsultation_0.pdf 2022. 3. 14.
- OECD. (2020). *How's life: measuring well-being*. Paris: OECD.
- Vrooman, J. C., & Hoff, S. J. (2013). The disadvantaged among the Dutch: A survey approach to the multidimensional measurement of social exclusion. *Social indicators research*, 113(3), 1261-1287.
- Van Bergen, A. P., Hoff, S. J., Schreurs, H., van Loon, A., & van Hemert, A. M. (2017). Social Exclusion Index-for Health Surveys (SEI-HS): a prospective nationwide study to extend and validate a multidimensional social exclusion questionnaire. *BMC Public Health*, 17(1), 1-13.
- Social exclusion index-for health surveys (SEI-HS): a prospective nationwide study to extend and validate a multidimensional social exclusion questionnaire. *BMC Public Health*, 17(1), 1-13.

Another Viewpoint on Social Exclusion: People Who Exclude Themselves

Cheong, Sejeong

Kim, Ki-tae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Studies or policies related to social exclusion have conventionally focused on the groups needing help or support. We approach the subject of social exclusion in alternative way, by identifying groups of people who don't want to get help or support from others. We categorized survey respondents into four groups: the 'non-excluded group' who have someone to turn to and who are willing to seek help (Group I), the 'voluntarily excluded group' who have someone to whom they can turn but who are not willing to seek help (Group II), the 'involuntary excluded group' who do not have someone to whom to turn but who are willing to seek help (Group III) and the 'self-withdrawn group' (Group IV) who neither have someone to turn to for help nor are willing to seek help.

The data from the 「Social Participation, Capital, Awareness」 survey showed that there was a higher percentage in Groups I and III (those who were willing to seek help) who agreed to the government's role in reducing income inequality and expanding social welfare. In addition, the willingness to participate in society was higher in those willing to seek help (Groups I, and III) than in those not willing to seek help (Groups II and IV).

This study has contributed to taking the first step toward a comprehensive understanding of social exclusion by capturing groups who are not willing to seek help. It is necessary to keep in mind that these groups are highly likely to remain in a blind spot even if the society and the state have a support system. Further and in-depth studies of these populations will be needed.